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위 통과...16일 본회의 처리

야6당 공동 발의, 비토권 없애고 ‘외환 혐의’ 추가 국힘은 ‘외환·내란 혐의’ 삭제한 계엄 특검법 검토

야당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삼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 등의 내용에 항의하며 퇴장했고,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범위를 축소하든 이른바 ‘계엄 특검법’ 초안 마련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명된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특검법에 담기지 않았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의 유출 우려에 관해서는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대신 그 내용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수사 범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분장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가 추가됐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우리의 안보 현실을 외면한 정치공세 수사사외에 볼 수 없다”며 “지난 1년간의 안보 이슈를 외환죄로 수사하지는 것이 자의적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특검법은 16일 본회의에 회부돼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또 이른바 ‘계엄 특검법’ 초안을 마련하며 반격에 나섰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등이 준비한 국민의힘 계엄 특검법 초안은 민주당 특검 법안에 들어가 있는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 선동 혐의’를 삭제하고 관련 고소·고발 사건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또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배분하고 최장 150일인 수사 기간과 총 155명인 수사 인력도 축소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 초안을 바탕으로 이날 오후 의원 총회 논의를 거쳐 발의 여부를 최종 검토할 예정이다.

특검법 발의에 부정적인 당내 여론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여당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원내 지도부의 기류다.

민주당 특검법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여론전으로 효과적이라는 판단과 함께 민주당의 내란특검법 표결 시 내부 이탈표를 단속할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당에서는 이번 주 내란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즉각 수정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시도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안을 비판하는 여론전도 이어가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전혀 맞지 않는 모순투성이, 정쟁용 특검”이라며 “이런 특검법을 또다시 독단적으로 처리한다면 어느 국민도 특검의 공정성, 중립성을 믿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안을 비판하는 여론전도 이어가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전혀 맞지 않는 모순투성이, 정쟁용 특검”이라며 “이런 특검법을 또다시 독단적으로 처리한다면 어느 국민도 특검의 공정성, 중립성을 믿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삼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행정처장 “계엄 수사 논란 잠재울 방안은 내란특검”

국회 법사위서 입장 밝혀

전대법 법원행정처장은 13일 “내란 특검”이 비상계엄 관련 수사의 절차적인 논란을 잠재울 방안”이라고 밝혔다.

전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박규택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 처장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점점 증폭돼 가는 상황이며 논란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특검법을 통해 수사를 처음부터 다

시 하는 것”이라며 경찰 외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권 존재 여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청구 관할 법원, 윤석열 대통령 수색영장의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배제 조항 등과 관련한 논란을 언급했다.

전 처장은 “경찰 외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저 또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영장이 발부됐다”며 “일차적인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이 나중에 상급심에서 다시 바뀌기 전까지는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 관점에서 옳다”고 설명했다.

다.

전 처장은 야6당이 제발의한 법안 중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부분에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객관성 독립성 측면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다”며 난색을 보였다.

다만 “여야가 서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특검법을 입법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국회의 헌법에 정해진 권한의 행사니까 사법부로서는 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행 “특검법안 여야 협의로 마련해 달라”

여야 대표 면담 뒤 요청 “체포영장 집행 충돌 안 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면담하고, 여야 협의로 특검법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권 위원장을 만나 “여야 논의가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을 같이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든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또 “민생과 경제, 통상 분야에 있어서 여·야·정

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협의를 활성화하기를 희망한다”며 “국정협의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류법, 전력법 등 민생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국회에서 민생 경제를 위해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 협의를 활발하게 해주길 기대한다”면서 “민생경제를 위해 올해 예산의 40%를 1분기에 조기 집행하고, 7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 오면서 ‘국민의 생명과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좋은 정부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토머스 제퍼슨의 말을 되새기면서 왔다”며 “국회나 정부나 그런 목표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尹측,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무더기 이의신청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긍정적인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13일 기피 신청을 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재판관에게 긍정적인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정계선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달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또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고 덧붙였다.

헌재법에 따라 재판관과 재판 당사자가 친족인 경우 등 외에도 “재판관에게 긍정적인 심판을 기대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 변론 전까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현재는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면 각하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울러 현재가 지난 3일을 끝으로 변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14일 정식 변론에 들어가기로 한 것도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선행되기 전까지는 “재판부의 적법한 구성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대한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변론기일 참여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전제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운 박사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수시	정시
인문사회	신학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범	유아교육과	8	2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실용음악학 전공)	21	8
총계		84	21

※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2. 31.(화) ~ 2025. 1. 3.(금)
· 전형일: 2025. 1. 13.(월)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로330로 36

www.kwangshin.ac.kr